

예산 조기집행 감사 16일 만에 ... “7조원 더 풀렸다”

‘돈맥경화’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 상반기 화두로 삼았던 재정의 조기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일 “병목 현상 해소, 적극 행정 독려 등으로 7조1468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조기 집행됐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재정 조기 집행 실적은 3월 말 현재 중앙재정 84조원(목표 76조원), 지방재정 47조원(목표 46조원)이었다. 이번 감사를 총괄한 박수원 재정·조세감사국장은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은 결과”라면서 “여전한 비합리적 관행과 부처 간 장벽 등 개선사항이 여럿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돈줄은 왜 막혔을까= 먼저 안일한 관행이 문제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진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사업’이 대표적이다. 교과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초·중·고 자녀 가운데 성적 우수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에게 학용품·교재 구입비로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장학금 수혜 대상은 시험을 칠 때마다 발생하는데 교과부는 매 학기 직전 연 2회 신청·지급하는 관행을 이어 왔다. 그 결과 2월 말 기준 집행실적은 71.9%(1334억원 가운데 959억원)였다. 감사원 지적 이후 교과부는 ‘장학금 상시 신청제도’를 도입했다.

소극적 행정 집행도 여전했다. 117개 사업에 참여한 424개 하도급 업체가 받아야 할 사업

비 1106억원은 원도급 업체 금고에 있었다.

부처 간 장벽도 문제였다. 서울 성북구 등 15개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사업비 2300억원)은 전선을 땅속에 묻는 사업이 늦어지면서 진척이 되지 못했다. 사업비 분담을 놓고 서울시와 한전이 대립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나선 끝에 사후정산을 조

건으로 서울시가 공사비를 우선 부담하기로 했다.

재정 집행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계획이 세밀하지 않아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비(1조3914억원)는 투자 및 소비유발 효과가 큰데도 조기 집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경기효과와 관계없는 제세공과금 2135억원은 대상에 포함돼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연말엔 낭비 적발=성용락 감사원 사무총장은 “조기 집행을 틈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10

월까지 조기 집행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재정 집행이 마무리되는 11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연도 말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에 나선 예정이다. 재정·금융 감사국, 자치·행정 감사국 등 주요 부서 대부분이 참여해 한 달 반 동안 감사를 벌인다. 김영호 공보관은 “재정 조기 집행 감사 못지않은 대규모를 통해 예산 낭비 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돈줄, 왜 막혔나 들여다보니 ...

① 안일한 관행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매년 두 차례만 지급
→ 수혜자 수시 선정 요구 (320억원 조기집행 기대)

② 부처 간 장벽

서울시·한전 공사비 분담 미루다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차질
→ 사후 정산 조건으로 서울시 부담 (764억원 조기집행 기대)

③ 부실한 계획

처음부터 구체적 사업 지침 없어 주거복지사업비 집행 대상에서 제외
→ 조기집행 대상에 신규 편성 (1조3914억원 조기집행 기대)

자료: 감사원

※ '09.4.20.보도자료 배포한 「재정조기집행 실태점검」 과 관련된 기사가 동아, 중앙, 서울,매경,세계,파이낸셜,KBS,MBC에 보도됨<재정조세1과>

‘전봇대’에 막힌 재정집행 급한 돈 7조원 헛돌아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으나 일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현장’에서 이를 가로막는 ‘전봇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정조기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금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찾아내 모두 7조1468억 원의 집행 병목 현상을 발견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전봇대’의 사례로는 △관계 기관끼리의 협조 부족 △불합리한 관행 고수 △여유 자금 꺼안고 안 풀기 등이 꼽혔다.

감사원 48개 기관 점검

● 관련 기관 협조 부진

경기 김포시는 한강 하구의 ‘책선 제거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관할 군부대와 협의가 늦어져 기본 설계 용역조차 못했다. 또 서울 성북구 등 서울 시내 15개 구청에서 추진하는 디자인 거리 조성 사업 역시 먼저 해야 할 전선 지중화(地中化) 공사 비용(746억 원)을 누가 부담할지를 둘러싼 서울시와 한국전력공사 간의 견해차로 지연됐다. 결국 감사원이 김포시 관할 군부대에 용역 실시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지중화 공사는 서울시가 먼저 비용을 부담하도록 조치한 후에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한강하구 책선 제거
軍과 협의 늦어 용역못줘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비 이견으로 지연

● 불합리한 관행 고수

중소기업청은 장사가 안 돼 폐업하려는 자영업자의 재창업과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으면서 신규 창업자 지원 대상과 같은 수준의 신용등급과 영업 경력을 요구했다. 그러나 장사가 안 돼 가게 문을 닫을 처지의 자영업자들이 이 기준을 만족시킬 리 없었다. 결국 지난달 20일까지 겨우 15명만 신청해 집행실적이 0.05%밖에 안됐다. 감사원은 지원 요건을 현실에 맞게 낮추라고 요구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경제난으로 매일 대상자가 늘어나는 다급한 상황인데도 예전처럼 매학기 직전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관행을 유지하다가 제도를 변경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 돈 꺼안고 안 풀기

감사원이 경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의 지역개발기금을 점검한 결과 경남도 567억 원, 충북도 476억 원 등 1163억 원이 조기집행에 쓰이지 않고 보관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영세업자 재창업 지원
높은 수준 신용등급 요구



저소득층 장학금 절실한데
학기 직전 신청접수 고수



지역개발기금 1163억원
지자체 금고에서 낮잠

재정 3조4400억 집행 중간단계서 ‘정체’

감사원 “부처 사업지연 심각… 수혜자에 전달 안돼”

범정부 차원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벌이는 재정 조기집행이 곳곳에서 병목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재정조기 집행 실태 점검’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최종 수혜자가 공사대금이나 보조금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다는 점이다. 관계기관끼리 협조가 부족해 사업이 늦어지는 문제도 심각했다. 일부 기관은 인건비를 조기집행 대상으로 포장한 반면 어떤 기관은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원도급업체들이 선

급금을 수령해 그 중 1106억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집행 중간단계에서 정체돼 있는 공사대금·보조금·용자금이 모두 3조 4400억원이나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부터 2233억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사업을 추진하면서 1년에 두번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관행에 묶여 2월 말 기준 집행목표 1334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959억원만 집행했다.

중소기업청은 폐업(예정) 자영업자의 재창업과 업종전환 지원용 정책자금 1000억원을 올해 신규로 편성했지만 집행률은 0.05%에 그치고 있는 실정.

대한주택공사는 조기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투자와 소비 유발효과가 있는 주거복지사업비(1조 1953억원)와 수선유지비(1961억원)는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경기진작 효과가 없는 제세공과금 2135억원은 대상에 포함시켰다.

감사원은 “재정집행을 가로막는 문제를 현장에서 해소하는 데 주력한 결과 모두 7조 1468억원에 이르는 자금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재정 풀면 뭐하나 곳곳서 ‘병목’

감사원, 7조원 예산 시정조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입 지연이나 예산 낭비 등으로 7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일 발표한 ‘기획재정부 등 48개 기관에 대한 재정 조기집행 실태점검’ 결과를 통해 잘못된 대상 사업 선정, 자금집행 과정의 병목현상 등 문제로 지체된 7조1468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조기집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정 조기집행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가 대상 사업 선정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시달리지 않아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은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적절한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한주택공사는 주거복지사업비, 수선유지비 등 투자와 소비 유발효과가 큰 1조3914억원에 달하는 자본 예산이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경기진작 효과와 무관한 제세공과금 2135억원을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중간 단계에서 집행이

지체돼 최종 수혜자까지 제때 전달되지 않는 병목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장학금 수령 대상자가 연중 수시로 발생하지만 매학기 직전에 신청·지급하는 관행을 고수하면서 2월 말 기준 집행목표 1334억원 중 375억원(28.9%)이 조기집행되지 않고 있었다. 또 국토해양부에서 공사대금 선금을 지급받은 원도급업체 가운데 34%가 하도급업체에 줄 대금 1106억원을 부당하게 보유하고 있어 하도급업체 자금난 심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전정홍 기자

재정 조기집행 ‘병목현상’ 여전

감사원, 48개 기관 점검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으나 일부 중앙부처와 공기업에서 재정 투입 지연이나 예산 낭비 등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일 “기획재정부 등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총 191명을 투입해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금집행 과정의 ‘병목현상’ 등을 적발하고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주거복지사업비, 수선유지비 등 1조3914억원에 달하는 자본예산이 기업과 가계에 대한 지출로, 투자 및 소비 유발효과가 큰데도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대로 경기 효과와 무관한 제세공과금을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외기자재 구매대금 427억원 등을 조기 집행하는 등 7개 기관에서 내수 진작 효과가 없는 외자구매대금을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기자

정부 예산 엉뚱한 곳에 '핑핑'

3월까지 131兆 집행... 낭비·지연 여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노력에 따라 지난 3월 말 현재 중앙정부 84조원, 지방자치단체 47조원 등 총 131조원의 집행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배 빠른 것이지만 자금집행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등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 조기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의 적극적 재정 조기집행과 감사원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앙부처와 공기업에서 재정투입 지연 현상이나 예산낭비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조기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재정부가 사업 시행 기관에 대상사업 선정·추진요

령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시달치 않아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은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적절한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투자 및 소비유발 효과가 큰 주거복지사업비, 수선유지비 등 1조3914억원을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에 경기 효과가 없는 제세공과금 2135억원은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외기자재 구매대금 427억원 등을 조기 집행하는 등 7개 기관에서 내수진작 효과가 없는 외자구매대금을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sykim@fnnews.com | 김시영기자